

12강 - 학교폭력 사고의 책임

■ 핵심용어(용어사전)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일정기간 선도위원의 선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미뤘다가 선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소하지 않는 것이며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이 검사가 부모나 유력한 제3자가 잘 보호하고 훈육하는 조건하에 기소유예로 풀어 주는 것을 말한다.

■ 사례 :

<사건의 개요>

경상북도가 설치 운영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인 A는 교실에서 수학 수업을 받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C의 팔을 쳤다. 이에 B가 C에게 팔을 친 것은 A라고 말을 하자, A는 팔을 친 것에 대하여 B가 C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B에게 너희엄마 창녀'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격분한 B는 A에게 주먹으로 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에 수업을 진행하던 수학교사는 즉시 A를 우선 가까운 의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보다 큰 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의 소견에 따라 다시 큰 병원으로 이송하였음에도, A는 처음 얼굴을 맞은 후 3시간 쯤 지난 후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A의 부모는 학교의 설치 운영자인 경상북도(대표자 교육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A 부모의 손해배상청구는 타당한가?

<이 사건의 쟁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

<사건의 결말>

A와 B가 서로 장난을 하던 중 A가 B에게 어머니에 관한 욕설 등을 하자, 이에 흥분한 B가 A에 대한 순간적인 3회의 가격행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A와 B사이의 말장난이 폭행으로 진행된 시간은 불과 수초에 지나지 않아 옆자리에 있던 C 등이 이들을 말리지 못했던, A와 B는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평소 자주 서로 장난을 치는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등 평소 성행, A와 B사이의 친소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발생의 때와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학교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정규 수업시간 중에 수업을 받는 학생인 B가 A를 사망에 이를 정도로 구타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A부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의 의견>

학교나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의 범위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

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그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본 학습>

1. 학교폭력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개관

민사적 책임에서는 흔히 치료비, 병원비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부모, 교사, 학교설치경영자(국·공립학교의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사이버폭력의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명예를 회복시키거나 정보를 보호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며, 학교폭력을 통해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사실과 사과문을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게 하거나, 본인이 구타당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학생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가해자 및 감독의무자에게 병원비 등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1) 서로 합의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데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경미한 경우 피해학생(및 보호자)과 가해학생 및 감독의무자(가해학생 보호자 및 교사, 학교법인, 지방자치단체, 국가) 매우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합의도출이 어렵고 비공식적인 사건처리로 인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사건처리가 되지 않아 당사자들은 상당기간 심리적 불안 상태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 측에서는 사고로 인한 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으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된 때에는 다시 학교나 교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2) 사단법인 학교 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교육활동중의 사업에 대해 요양급여, 폐질급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공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방법은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최종처리는 손해배상 청구방법이 있다.

형사책임으로는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성이 없다하여 처벌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한다. 다만 만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등의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더라도 보호관찰 등의 조치는 가능하다. 만20세 미만의 소년은 대개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여 보호관찰을 받게 되지만 그 행위가 중하면 소년원에 보내지게 된다. 물론 학교폭력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2. 형사책임-형사사건의 처리절차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치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는 자율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법에 따른 것이며 형사 책임까지 면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 가해학생이 만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이므로 벌할 수 없으나(형법제9조) 가해학생이 만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이 만10세 미만인 경우에도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19세 미만인 자이며 죄를 범한 소년을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재촉되는 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우범 소년이라고 하고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총칭하며 비행소년이라고 한다.

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고소나 학교장의 고발 등이 있게 되면 수사가 개시되는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경찰단계에서 경찰서장이 훈방을 하거나 검찰단계에서 비교적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또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며,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공소권없음’처분을 받게 된다.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에는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가정법원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따라 각종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사안이 지극히 중대한 경우에는 기소되고 정식재판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 소년법의 주요 내용

가.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제8호 처분

③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제32조의2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 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①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제32조제1항제4호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제32조제1항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2조제1항제2호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제3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위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4. 가해학생 및 학부모(가해학생 감독의무자)의 책임

(1) 가해학생의 책임

불법행위자인 가해학생 본인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민법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가할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53조). 여기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라 함은 책임능력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통상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비난을 받는 도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나아가 그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을 받고 어떤 법률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는 책임무능력자의 연령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만12세 미만인 경우는 민법 제7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한 지능이 없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반면에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대체로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학부모의 책임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실제로 그 친권자가 일반적 지도·교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친권자에게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민법은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이를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그 무능력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는 하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55조).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부모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그러나 판례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부모들이 민법 제755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감독의무자로서 부모의 의무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605 전원합의체 판결)

(3) 교사 및 학교(설치경영자)의 책임

학교 관계자(교장이나 교사)는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된다. 즉 대리감독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판례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

1) 대법원 2007. 4.26. 선고 2005다24318 손해배상(기)

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²⁾³⁾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⁴⁾.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교사는 학교폭력사고와 관련하여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이 있는 경우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를 불문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점이 국가배상법상 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국·공립학교 교사와 차이가 있다.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사실상 대폭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

(4) 부모의 책임과 교사 등 학교측의 책임과의 관계

가해학생의 부모의 법정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과 담임교사 등 학교측의 보호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이 경합하여 학교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자의 책임은 병존할 수 있다고 보아 부모와 학교측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⁵⁾

2)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2001. 4. 24. 선고 2001다5760 판결

3) 대법원 2007. 4.26. 선고 2005다24318판결, 망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가해학생들의 망인에 대한 폭행 등은 거의 대부분 학교 내에서 휴식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또한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당시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의 담임교사인 소외 1로서는 학생들의 동향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였더라면 망인에 대한 폭행 등을 적발하여 망인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망인에 대한 폭행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소외 1, 2는 망인의 정신적 피해상태를 과소평가한 나머지 망인의 부모로부터 가해학생들과 망인을 격리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절하면서 가해학생들로부터 반성문을 제출받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 또한 그 이후의 수학여행 중에도 망인에 대하여 보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우관계에 있는 학생을 붙여주는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1, 2의 위와 같은 공무원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대법원 2007. 4.26. 선고 2005다24318 손해배상(기),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5) 대법원 2007. 4.26. 선고 2005다24318,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

이 경우 어느 일방이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비율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교사 등 학교설치자와 부모 등 친권자측의 사고발생에 대한 각자의 관여비율, 즉 교사와 친권자의 각자 보호·감독의무의 해태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⁶⁾

(5) 교사의 개인 책임

교사의 개인 책임은 사립학교의 교사와 국·공립학교 교사 사이에 차이가 있다.

사립학교의 교사는 학교폭력 사고의 발생에 있어 그에게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이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를 불문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학교폭력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고에 대하여 학교설치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국·공립학교의 교사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그 교사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된다.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공립학교의 교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사실상 대폭 제한된다.

(6) 교사의 학교 설치자로부터의 구상책임

학교의 설치·경영자가 피해학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교사에게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결과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이론상으로는 경과실의 경우에도 구상권

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가해학생들의 부모인 위 피고들의 보호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면서, 위 과실과 담임교사인 소외 1과 교장인 소외 2의 보호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과 피고 경기도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 6) 서울지방법원 2008가합31880 구상금, 원고와 피고들은 r등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판결에 따라 각자 그 손해금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위 손해금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 즉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r등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이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손해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원고의 피고들이 각기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형평의 원칙상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비율, 즉 책임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데, 비록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피고 학생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위 집단괴롭힘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였고 학교로서는 적극적인 감독 및 보호활동을 펼칠 경우 이를 제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의 책임이 작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집단괴롭힘의 경위, 피고 학생들의 가해 정도, 피고 학생들 부모의 감도 소홀, 원고의 피고 학생들에 대한 감독 소홀 및 r에 대한 보호 소홀의 정도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대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4 대 6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7)교장 등 관리책임자의 개인 책임

사립학교의 총장, 학장, 교장, 단장, 이사 등 학교관리책임자는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의 책임(소위 사업대리감독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무'의 집행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의 행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국·공립학교의 관리직 종사자에 관해서는 민법 제75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정리하기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민사적 책임에서는 흔히 치료비, 병원비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부모, 교사, 학교설치경영자(국·공립학교의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불법행위자인 가해학생 본인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민법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가할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53조). 여기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라 함은 책임능력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통상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비난을 받는 도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나아가 그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을 받고 어떤 법률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책임으로는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성이 없다하여 처벌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한다. 다만 만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등의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더라도 보호관찰 등의 조치는 가능하다. 만20세 미만의 소년은 대개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여 보호관찰을 받게 되지만 그 행위가 중하면 소년원에 보내지게 된다. 물론 학교폭력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 평가하기

문제1. 학교폭력사건에서 가해자 등의 민사책임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민사적 책임에서는 흔히 치료비, 병원비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부모, 교사, 학교설치경영자(국·공립학교의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3)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방법은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최종처리는 손해배상 청구방법이 있다.

(4) 사단법인 학교 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교육활동중의 사고에 대해 요양급여는 가능하나, 폐질급여,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해설 : (4)

사단법인 학교 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교육활동중의 사고에 대해 요양급여, 폐질급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공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2. 학교폭력사건에서 가해자 등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형사책임으로는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성이 없다하여 처벌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한다.

(2) 만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등의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더라도 보호관찰 등의 조치는 가능하다.

(3) 만20세 미만의 소년은 대개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여 보호관찰을 받게 되지만 그 행위가 중하면 소년원에 보내지게 된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치는 받았다면 법에 따른 처벌이므로 별개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므로 형사법상의 처벌을 할 수 없다.

해설 : 정답 (4)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치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는 자율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법에 따른 것이며 형사 책임까지 면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 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가해학생이 만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이므로 벌할 수 없으나 가해학생이 만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가해 학생이 만10세 미만인 경우에도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3) 소년법상 소년은 만19세 미만인 자이며 죄를 범한 소년을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재촉되는 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우범 소년이라고 하고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총칭하며 비행소년이라고 한다.

(4) 수강명령은 5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 정답 (4)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